

「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」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84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26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 공모 및 숙려제 운영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사무명: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) 제1항, 제7항, 제8항 및 제9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제2항 및 제3항
- 「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」 제6조(추진사업) 및 제8조(사무의 위탁)
- 「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및 제5조(의회의 동의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 기간을 제공해야 하고 교육감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
-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(숙려)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

다. 민간위탁 사무 내용

- 기관별 특화된 진로·직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(월~금, 09:00~12:00), 학교 방문 및 구체적 진로 소개, 상담 등 견학 및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 실시
-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(매주 최대 10명)이 학교를 통해 신청하여 운영하고, 참여기간 동안 출결 및 참여 상황 등을 학교에 연락
- 프로그램 원활한 운영 및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

- 라. 민간위탁 기간 : (2024학년도) 2024년 4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 (매년 공모를 통한 기관 선정 및 사무위탁 예정, 「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(재계약) 추진 시 의회 재동의 추진 예정)
- 마. 수탁기관 선정 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관 선정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: 공무원과 교수, 변호사, 세무사 등 6인 구성(조례 제9조)
 - ※ (필요시) 기관 선정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수탁 신청기관 선정협의회를 구성·운영(민간위탁 운영실적이 있는 위원 5인 이내)하여 검토 결과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최종 승인 추진
- 바. 소요 예산액 : 109,240천원(5개 기관) ※ 소요예산은 년도 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로 2023년 대비 총14,760천원 감액(기관당 2,952천원 감액)
- 사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(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-13077, ' 23.10.16.)
- (관계법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 제1항, 제7항, 제8항 및 제9항,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54조 제2항 및 제3항, 「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」 제6조 및 제8조, 「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 - (적정성) 학교생활 부적응 및 심리·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체험, 체험학습, 진로탐색 등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, 안정성이 요구되므로, 지역대학 및 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의 명목과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 능률적이라 판단됨
 - (전문성)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프로그램 위탁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지역대학, 전문 기관에서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정함
 - (연계성) 교육감 지정기관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력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고, 교육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외부 위탁기관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함

3. 참고사항

가.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프로그램 외부기관 위탁 추진현황

년도	지정기관	참여 인원	학업지속학생수 (지속율)	지원금(천원)
2021	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등 5개 기관(상, 하반기)	207명	172명 (83%)	100,000
2022	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5개 기관	339명	270명 (80%)	124,000
2023	대구보건대 학생상담센터 등 5개 기관	293명 (23.10.현재)	241명 (82%) (23.10.현재)	124,000 (기관당24,800)

나. 관련법규: 붙임 1

다.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외부기관(민간위탁) 추진계획: 붙임 2

라. 민간위탁 협약서(안): 붙임 3

붙임 1**관련법규****초·중등교육법**

제28조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(이하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22. 12. 27.>

1. 성격장애나 지적(知的)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

2. 학업 중단 학생

3.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2. 3., 2022. 12. 27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<신설 2022. 12. 27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.<신설 2016. 2. 3., 2022. 12. 27.>

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2. 3., 2022. 12. 27.>

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를 지도·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2. 3., 2022. 12. 27.>

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<신설 2016. 12. 20., 2021. 3. 23., 2022. 12. 27.>

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<신설 2016. 12. 20., 2021. 3. 23., 2022. 12. 27.>

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 12. 27.>

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, 방법, 절차,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22. 12. 27.>

조 · 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54조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(이하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이라 한다)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. <개정 2016. 8. 2., 2023. 6. 27.>

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16. 8. 2., 2023. 6. 27.>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.<개정 2012. 4. 20., 2013. 3. 23., 2016. 8. 2., 2022. 8. 30., 2023. 6. 27.>

1. 교육 · 복지 ·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
2. 진단 · 상담 · 치유 ·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신설 2010. 12. 27., 2013. 3. 23., 2022. 8. 30.>

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
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6조(추진사업)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한 교육 · 상담 · 교원 연수 및 숙려제 운영
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
3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4. 학업중단 학생의 재취학 및 재입학을 위한 상담 · 학습지원 · 교육 · 단기 보호 등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재정지원 등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,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·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타 기관 ·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
6.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의회의 동의)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단순 행정사무
3.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전액을 교부받거나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

② 교육감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,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)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3. 민간위탁 사무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기관 선정 방식
6. 소요 예산액
7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8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계약의 체결)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2. 민간위탁의 목적
3. 민간위탁 기간
4. 민간위탁 사무 내용
5.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6.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
7.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
8.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위탁기간 및 재계약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붙임 2**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외부기관(민간위탁) 추진계획****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추진계획****I 추진배경**

-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탁 프로그램 이수기관 지정을 통한 위기학생 학업복귀 지원
-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통한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

-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도래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추진
-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실시

II 관련근거

- 초·중등교육법 제28조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)
-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)
-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6조(추진사업) 및 제8조(사무의 위탁)
-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III 추진현황

년도	지정기관	참여 인원	학업지속 학생수(지속율)	지원금(천원)
2021 상반기	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등 5개 기관	93명	73명 (79%)	50,000 (기관 당 10,000천원)
2021 하반기	대구보건대학교 등 5개 기관	114명	99명 (87%)	50,000 (기관 당 10,000천원)
2022	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5개 기관	339명	270명 (80%)	124,000 (기관 당 24,800천원)
2023	대구보건대학교 등 5개 기관	293명 (23.10.현재)	241명 (82%) (23.10.현재)	124,000 (기관 당 24,800천원)

IV 민간위탁 추진계획**1. 추진 방향**

- 증가하고 있는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외부 이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
- 민간위탁공고 후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투명성 유지

2. 위탁 기간: (2024학년도) 2024. 4. 1. ~ 2024.12.31. (매년 공모를 통한 기관 선정 및 사무위탁 예정,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(재계약) 추진 시 의회 재동의 예정)
3. 위탁 대상: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
4. 위탁 방법
 - 수탁기관 공개모집 추진
 -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
5. 위탁 주요사업 내용
 - 기관별 특화된 진로·직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(월~금, 09:00~12:00), 학교 방문 및 구체적 진로 소개, 상담 등 견학 및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 실시
 -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(매주 최대 10명)이 학교를 통해 신청하여 운영하고, 참여기간 동안 출결 및 참여 상황 등을 학교에 연락
 - 프로그램 원활한 운영 및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
6. 위탁 소요예산: 109,240천원(5개 기관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)
 - ※ 소요예산은 년도 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(당초 124,000천원으로 수립하였으나 202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 통보로 14,760천원 감액)
7. 수탁대상 기관
 - 대구에 위치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
8. 민간위탁기관 선정
 - 가. 민간위탁 공고
 - (관련법규)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 - (공고내용)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위탁 기관 공모
 - (공고방법)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
 - (공고기간) 2024. 2~3월(별도 일정)
 - 나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 - (접수기간) 2024. 2~3월(별도 일정)
 - (접수방법) 업무관리시스템(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) 또는 인편 제출
 - 다. 민간위탁 적격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
 - (근거)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)
 - (구성계획) 공무원과 교수, 변호사, 세무사 등 6인 구성
 - ※ (필요시) 기관 선정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수탁 신청기관 선정협의회를 구성·운영(민간위탁 운영실적이 있는 위원 5인 이내) 하여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승인
 - 라. 위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
 - 1) (심사 방법) 심사위원 개별 서면 심사
 - 2) (심사 내용)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위탁 수탁기관 5개 기관 선정
 - 심사위원 개별 서면 심사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고득점인 기관 중 5개 기관을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

3) 심사 기준

영역	평가 내용	배점
환경 적합성	학생 참여 용이성, 교육기관 시설 및 환경	20
프로그램 내용	구체적 진로·직업과의 관련성, 체험 위주의 구성, 학업중단 예방 효과 여부	30
전문성	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교수진의 전문성	20
공공성	공적이익을 위한 운영 취지 및 목적	20
책임 관리	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	10
계		100

V

적정성 검토 결과

- (적정성) 학교생활 부적응 및 심리·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체험, 체험학습, 진로탐색 등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, 안정성이 요구되므로, 지역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서 위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 능률적이라 판단됨
- (전문성)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프로그램 위탁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지역 대학, 전문 기관에서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정함
- (연계성) 교육감 지정 기관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력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고, 시교육청 사업 담당 부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외부 위탁기관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함

VI

향후 추진 일정

순	내 용	일 시
1	민간위탁 위탁기관선정 심사 계획수립	24. 1.
2	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	24. 2. ~ 24. 3.
3	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및 계약 체결	24. 3.
4	숙려제 외부 위탁프로그램 운영	24. 4. ~ 24. 12.
5	운영 점검 및 컨설팅	24. 5 ~ 24. 6.
6	수탁기관 평가 및 사업 정산	25. 1 ~ 25. 2.

VII

기대효과

-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통한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
- 부적응 학생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안정적인 학업 복귀 및 관계 회복 지원
- 심리·정서적 위기학생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장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
-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기관 확보

붙임 3**민간위탁 계약서(안)**

☞ 개별법령이나 상급기관 지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.

☞ 본 표준안은 해당 사무의 성격, 특성, 대상 등에 따라 계약서 항목 중 수정, 삭제, 신설 가능

대구광역시교육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위·수탁 표준계약서

「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 중 일부를 위·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○○○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“교육감”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에 관한 사무를 “수탁자”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·수탁사무) ① “교육감”이 “수탁자”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)

1. 위·수탁사무

사무명	사무내용	비고

② 제1항의 위·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“교육감”과 “수탁자”가 협의하여 위·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(위·수탁기간 등)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천재지변 및 관련 사업 종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“교육감”과 “수탁자”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계획) ① “수탁자”는 사업계획서를 “교육감”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, 목표 달성 여부를

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.

③ “교육감”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, “수탁자”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수탁자”는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수정·보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“교육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“교육감”은 “수탁자”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, 결과를 재계약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의 수행) ① “수탁자”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“수탁자”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“수탁자”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,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근로약정 이행 등) ① “수탁자”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,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·복리후생·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탁자”는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, 위탁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2조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
3.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

제7조(관계법령 등의 준수) ① “수탁자”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「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탁자”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“수탁자”는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

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사업비 지급 및 집행)** ① “교육감”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)를 “수탁자”에게 지급하되, 그 금액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예산과 “수탁자”의 사업계획,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“교육감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정한다.
- ② “수탁자”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“교육감”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,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- ③ “수탁자”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,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탁자”는 제1항에 따라 “교육감”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업계획,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“교육감”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사업비 정산 및 반환)** ① “수탁자”는 “교육감”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정산서를 “교육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수탁자”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“교육감”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“수탁자”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“교육감”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지도·점검)** ① “교육감”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“수탁자”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면 “수탁자”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“교육감”은 제1항에 따른 보고·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“수탁자”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, “수탁자”는 “교육감”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11조(감사)** ① “교육감”은 연 1회 이상 위탁사무의 처리결과, 회계처리, 종사자 근로조건, 민원응대, 시설물 관리 실태,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.
- ② “수탁자”는 제1항에 따른 감사에 대해 서류제출, 관계자 면담 등 감사에 대해 최대한

협조하여야 한다.

- ③ “교육감”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등이 있을 경우 “수탁자”에게 시정조치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고, “수탁자”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정명령) ① “교육감”은 사무처리, 민원응대, 종사자 근로조건 등 사무처리 전반에 관하여 “수탁자”의 조치가 불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“수탁자”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, “수탁자”는 시정명령 후 20일 이내 이행결과를 “교육감”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“수탁자”는 “교육감”의 시정명령이 부당하거나, 해당 사무처리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7일 이내 소명할 수 있고, “교육감”은 그 소명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.

- ③ “교육감”은 “수탁자”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,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고, 2회 이상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④ “교육감”은 시정명령과 함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종사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종사자 징계 요구 등) ① “교육감”은 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“수탁자”에게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중대 민원 및 동일 반복민원 발생 등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중대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
 2. 근무지 무단이탈,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복무태도가 불량한 경우
 3. 업무편람 등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 4. “교육감”의 승인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부담하여 편취할 경우
 5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
 6. 성희롱, 성폭력,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, 회계부정,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이 있는 경우
 7. 그 밖에 “수탁자”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책임이 있는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는 경우
- ② “수탁자”는 “교육감”의 징계요구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“교육감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③ “교육감” 과 “수탁자” 는 종사자 징계 시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그 의견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종사자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“교육감” 과 “수탁자” 가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4조(성과평가 등) ① “교육감” 과 “수탁자” 는 협의에 의해 위·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, “수탁자” 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교육감” 은 위·수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재계약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.

③ “교육감” 은 “수탁자” 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감사 결과, 시정명령·종사자 징계 이행여부, 시민만족도, 사무처리와 관련한 언론보도사항, 종사자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재계약 평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른 민간위탁과 관련된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지위이전, 제3자 위탁 금지) ① “수탁자” 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.

② “수탁자” 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, 그리 안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“수탁자” 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“교육감”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“수탁자” 가 책임을 진다.

제16조(민·형사상 책임) ① “수탁자” 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·손실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수탁자” 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② “수탁자” 의 귀책사유로 “교육감” 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(재판상 청구에 한한다)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“수탁자” 는 “교육감” 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계약의 해지) ① “교육감”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수탁자”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
2. “수탁자”가 계약(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 등 포함)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3. “수탁자”가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의거한 법정 사업주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4. “수탁자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“교육감”의 시정명령 및 종사자 징계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(시정명령은 2회 이상)
5. “수탁자”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·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,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, 인권침해, 회계부정,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6. “수탁자”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
7. “수탁자”의 부도, 회생절차 개시, 파산, 해산, 영업정지,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8. “교육감”이 이 계약과 관련한 사업을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
9.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사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
- ② “교육감”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“수탁자”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“교육감”과 “수탁자”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고,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“수탁자”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.

제18조(비밀유지의무) ① “수탁자”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, 계약의 체결,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비밀사항,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,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,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계약의 해석)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. 다만, 합의가 원만히

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“교육감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20조(계약의 효력 등)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,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·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

2. “교육감”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
3. “교육감”이 “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 또는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

③ “수탁자”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“교육감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, “교육감”과 “수탁자”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○○월 ○○일

“위탁자” 대구광역시교육감 (직인)

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

“수탁자” ○○○ 대표자 ○○○ (인)

주소

주) 표준계약서는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·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.